

강기정 시장 “공공기관, 혁신 대상 아닌 주체”

민선8기 공공기관장회의 주제
시민 편의 증진·경영 효율 방점
서비스 질 제고·신뢰 회복 집중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은 시민 편의와 경영 효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광주시는 2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 민선 8기 제2차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기본원칙을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민선 8기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광주전략추진단(공공기관혁신팀)’을 신설, 조직 진단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 원칙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역할, 운영, 구조, 업무수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기능 중복 문제 최소화 및 경영 효율성 증대 ▲정부부처 및 시 부서 간 관리감독 체계 단일화를 통한 기능중심 관리체제로 개편 ▲공공기관 구조혁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8기 제2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신 참여도·노력에 따라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기관 수의 축소가 아닌 기능 중복 최소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 분산된 관리감독 체계 단일화를 통한 기능중

심 관리 체계로 개편해 시너지를 높이고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역할 회복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사

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실행력 강화로 시민 편의 증진, 광주시-공공기관 역할 재정립을 통해 창의와 변화의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혁신 기본원칙에 더해 최

근 정부가 제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기능 조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 구조혁신 세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시 공공기관 혁신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정장수 대구시 시장혁신단장은 “대구는 기능 중복, 예산 낭비 등으로 행정의 책임성·예산 효율성 저하 문제가 있었다”며 “기관장 임기 일치, 공공기관 통폐합, 임원연봉 상한제를 도입하고 기관 통폐합으로 책임성 강화, 운영 효율화, 공공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서비스가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반성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공공기관 효율성과 시민 편의 증진에 있다”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혁신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가 돼 함께 머리를 맞대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력충원에 대해 강 시장은 “공공기관 혁신 관련 용역이 끝나고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충원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설명했다. /길용현 기자

“시-자치구, 합리적 사무배분 검토해야”

광전연, 행정효율성 증진 제안

자치구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시와 자치구 간 사무배분의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6일 ‘광주시-자치구 간 사무배분 및 이양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를 통해 광역시와 자치구 간 균형있는 역할 분담과 자치구의 자치권 강화를 통해 합리적 사무배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에 비해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이 미흡해 여전히 사무중복, 광역 집중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 사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무만 이양되고 권한과 재원은 이양되지 않는 불일치가 나타나거나 사무이양 자체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 중심의 사무배분 기준을 마련해 시와 자치구 간 사무처리의 주체를 분명히 해 책임과 권한을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연구원은 계획이나 설치, 예산 지출은 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집행이나 유지보수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사무체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과 밀접한 행정 분야의 인·허가, 제한·규제, 승인 등의 지도와 감독 등의 사무도 자치구 이양을 검토해 볼 필요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함께 자치구의 자치사무 확대를 위해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부서별 직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2조에서 정한 14개의 특례사무, 지방보조금 사업 등을 대상으로 이양 필요성 또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치구 스스로 고유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사무배분 협의체 구성, 조례·상위법 개정 요구 등 제도화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효진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자치구의 행정 규모, 역량 등의 부족을 이유로 일부 사무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이제는 오히려 자치구의 행정 능력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자치구로의 재이관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통적으로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는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집행적 성격의 사무로 여겨졌으나,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편의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효과가 큰 사무 중심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광주시·시의회 ‘추경 갈등’ 봉합될까

오늘 재정 운용 회의

지난 연말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립했던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에 뜻을 모으기로 해 양측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27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광주 전략회의’를 열어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민생·산업·일자리·성장 예산을 적기에 편성해 지역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정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증액 없는 추경 예산안의 결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초래한 시와 시의회의 ‘화해 무대’ 성격이 짙다. 예산 편성·심의 대원칙, 국회 확보, 조기 추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심의에서 대폭 삭감된 현안 예산을 되살릴 추경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길용현 기자

전국체전 개·폐회식 주제 ‘생명의 울림 속으로’

오는 10~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이 ‘생명의 울림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남도는 2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연출 기본방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2월 개최 예정인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회에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체전 준비 관계자 등에게 개·폐회식 연출 구성과 주제, 연출 방향 등을 사전 브리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명성 총감독은 이날 “개·폐회식은 ‘생명의 울림 속으로’라는 주제로 태고

의 전남에서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의 모습을 미디어와 접목한 최첨단 무대 매커니즘을 활용해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자연과 사람, 만물의 원천인 생명을 깨우고 지키고 이어감을 울림이라는 추상적 단어로 압축해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은 전 국민적 관심을 끄는 축제의 장으로, 체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개·폐회식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일류 전남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를

향해 뛰는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탁월한 무대 연출 역량과 스포츠 행사 개·폐회식 기획연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무대를 만들어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 연출 대행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 참여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등을 통해 5월 초까지 대행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채민 기자

광주시의회, 전국 우수조례 평가 ‘대상’

광주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 조례 평가에서 단체 부문 최고상인 대상, 개인 부문 최우수상과 공무위원상을 수상했다. 단체 부문 대상에 선정된 ‘광주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는 박미정(민주당·

동구2)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광주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한다. 신수정(민주당·북구3)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는 개인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우수조례를 수상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한 의회사무처 김현진 주무관은 개인 부문 공무위원상을 수상했다. /길용현 기자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희망2023
나눔캠페인

나눔온도
100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1년 지원금액
7,104억

기부상당
062-222-3566
ARS기부
060-700-1213
홈페이지
https://gj.chest.or.kr/base.do

참여하기

지원대상

이웃 / 청소년
1,742억

노인
769억

장애인
423억

여성 / 다문화
401억

어린이
1,726억

지역사회
1,917억

해외 / 해외
126억

사업분야

기초생활
3,566억

교육 / 문화
1,025억

주택 / 주거
556억

문화 / 여가
564억

건강 / 의료
305억

안전 / 재난
723억

소통 / 정보통신
218억

문화유산유산
147억

보전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해당 지원내역은 2021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부금입니다. 지난해 7,104억 원으로 전국 3만 1천여개 파트너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